

## 국가 교육과정 개혁 과제 탐색: ‘2007 교육과정’의 검토와 반성\*

소경희(蘇京姬)\*\*

### 논문 요약

최근 새로운 국가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새로 도입된 '수시 개정 체제'를 따른 것이며,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러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수시 개정 체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새 교육과정이 과연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여지가 많다. 이 글은 최근 고시된 '2007 교육과정'을 반성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이 교육과정의 개정 및 고시 과정에서 발표된 관련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그 개정의 체제, 과정, 방향, 내용 등을 밝혀 보고자 했다. 즉 이 글의 목적은 새로 고시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이 교육과정이 따르고 있는 수시 개정 체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개정된 내용이 국가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향후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개혁 과제를 탐색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첫째, '2007 교육과정'이 따르고 있는 개정 체제와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시 개정 체제의 실체와 문제점을 논의했다. 둘째, '2007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및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교육과정이 함의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했다. 셋째,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향후 검토해 보아야 할 개혁 과제를 탐색해 보았다.

■ 주요어 : 국가 교육과정, 2007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적합성, 책무성

\* 본 논문은 한국교육학회 2007년 춘계 학술대회 교육과정 분과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2단계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 참여교수임.

## I. 서론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이 개발되며, 우리나라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편성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급 학교 혹은 각 학년에서 어떤 교과 영역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문서만 보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물론 각급 학교에서 국가 문서에 제시된 지침이나 의도대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지침에 토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 문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학교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 교육과정이 새로 개정될 때마다 개정된 교육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으며, 개정 고시된 문서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예민한 관심을 보인다.

최근 새로운 국가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새로 고시된 교육과정(이하 '2007 교육과정<sup>1)</sup>)은 '수시 개정 체제'에 따른 '부분' 개정임을 전면에 내세운다(박제운, 2007). 이 '수시 개정 체제'라는 것은 이번 개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종래 행해졌던 '주기적·전면적' 개정 체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등장한 용어이다. 종래의 국가 교육과정이 주기적이고 전면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던 데에 비해, 수시 개정 체제에는 국가 교육과정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교육과정을 수시로 혹은 부분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며, 이러한 개정의 결과가 어떤 모양새를 갖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조차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를 따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제운, 2007). 따라서 수시 개정 체제의 특징과 실체는 어쩌면 이 '2007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07 교육과정'은 그 개정 과정을 볼 때, 이전의 개정 때보다 더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쳤으며, 총론과 모든 교과가 일시에 개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sup>2)</sup>(소경희 외, 2006). 따라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된 금번 교육

1) 최근 새로 고시된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을 부분 수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고시 당시 공식적인 명칭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교육과정이 2007년 고시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의 편의상 '2007 교육과정'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2) 단, 수학과 영어의 경우는 다른 교과보다 개정 작업을 빨리 진행하여 이미 2006년 8월 29일에 개정된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과정 개정이 어째서 '수시·부분' 개정이라고 특징지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이 고시된 교육과정은 그 개정 체제가 어떠한 간에 그 적용 시점<sup>3)</sup>을 염두에 둘 때, 최근의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였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즉 '2007 교육과정'이 2009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새 교육과정은 2010년대를 내다보는 모종의 비전이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교육과정 변화를 추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혁이, 학생들이 미래의 사회적 삶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해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2007 교육과정'도 교육과정의 개인적·사회적 적합성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모종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새 교육과정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발한 이 글은 최근 고시된 '2007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이 교육과정이 따르고 있는 수시 개정 체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개정된 내용이 국가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향후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개혁 과제를 탐색해 보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첫째, '2007 교육과정'이 따르고 있는 개정 체제와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시 개정 체제의 실체와 문제점을 논의한다. 둘째, '2007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및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교육과정이 함의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셋째,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향후 검토해 보아야 할 개혁 과제를 탐색해 본다.

## II. '2007 교육과정'의 개정 체제 및 개정 과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7 교육과정'은 공식적으로 '수시 개정 체제'를 따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7 교육과정'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개정되었는가를 검토하는 일은 새로 도입된 '수시 개정 체제'의 실체와 이를 통해 나온 '2007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수시 개정 체제'의 도입으로부터 '2007

3) '2007 교육과정'은 2009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2010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2011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2012년에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그리고 2013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단, 다른 교과보다 개정 작업이 빨리 진행된 수학과 영어는 중등학교의 경우 그 시행도 다른 교과보다 먼저 적용된다. 즉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2009년에,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2010년에, 그리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2011년에 시행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a: ii).

교육과정'이 고시되기까지 발표되었던 관련 문서들을 중심으로 '2007 교육과정'의 개정 체제와 개정 과정을 검토해 본다. 공개된 문서에 토대를 둔 이러한 분석은 공개될 수 있는 것들에만 초점을 뒀으로써 '2007 교육과정' 개정 과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데 한계를 지니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문서들에 대한 철저한 수집과 분석은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 의미와 문제점을 드러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1. '2007 교육과정'의 개정 체제: '수시 개정 체제'로 포장된 전면 개정

'2007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 개정의 '형식'에 대한 것이다. 이 '형식'이란 바로 교육과정 개정 체제를 일컫는 것으로 새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에 따른 '부분 개정'이라는 점이 교육과정 개정 관련 보고서나 보도 자료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심지어 교육과정 개정 시안 보고서(허경철 외, 2005: 39)에 따르면 '수시 개정 체제 도입에 따른 부분적 개정'이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자 방침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2007b)도 새 교육과정 고시 직전에 발표한 보도 자료(2007년 2월 23일)를 통해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것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새로이 고시된 교육과정에 대해 그것이 담고 있는 개정의 주된 '내용'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그 '형식'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다소 의외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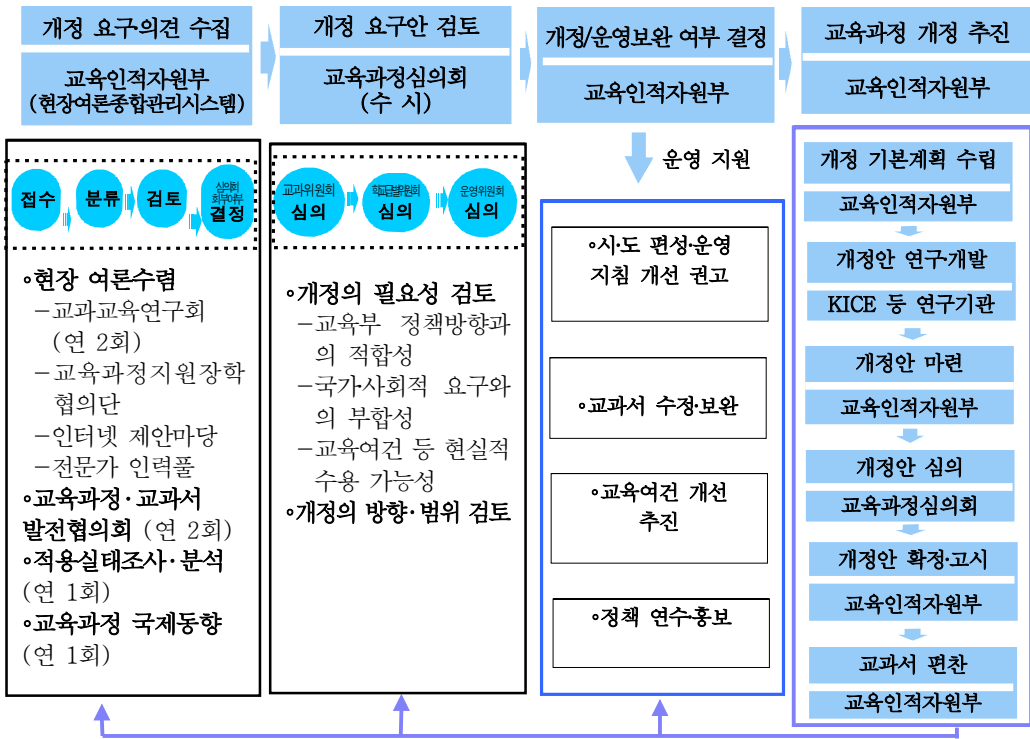
사실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 체제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전면적으로 일시에 개편해오던 종래의 방식은 여론과 학계의 비판을 받아 왔으며(조난심 외, 1999; 홍후조, 1999),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시·부분 개정 방식이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수시·부분 개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새를 말하는 것이며, 이 개정 방식이 그동안의 개정 방식을 대체할 만한 성격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와중에 현 정부는 정부 출범 이전 2002년 12월의 대선에서 교육정책 공약 사항 중의 하나로 '일괄 개편 - 전면 수정 체제'에서 '수시 개정 - 상시 개편 체제'로의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전환을 천명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이 공약 사항은 대선 승리 이후 2003년 1월 인수위원회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재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10월 14일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도입을 정식으로 정책화하였다(허경철 외, 2004: 23-24).

이후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는 이 체제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허경철, 2003; 우정호, 2003; 황규호, 2003; 홍후조, 2003; 김재춘, 2003)를 이끌어내긴 했으나, 여전히 이 체제의

도입에 대한 합의나 이 체제의 구체적인 모양새에 대한 탐색을 이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2005)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대한 학계의 다소 혼란스럽고 모호한 입장과 상관없이, 교육부총리가 2005년 2월 24일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확정·발표함으로써 이 체제를 교육인적자원부의 공식 입장으로 천명하였다. 이 점이 바로 '2007 교육과정'을 수시 개정 체제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그 방향과 성격을 특징짓는 이유에 해당한다. '2007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보고서에서도 이 점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바,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교육과정 개정 정책의 기초가 '수시·부분 개정'이기 때문에 새 교육과정 총론 시안의 연구는 이러한 정책 기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허경철 외, 2005: 11).

'2007 교육과정'에 기저가 되고 있는 '수시 개정 체제'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방식(허경철 외, 2005: 36)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다소 이상적인 방향을 함의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견이 없다. 그리고 이 수시 개정의 의미에는 개정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수시로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시간적 차원'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전 영역이 아닌 일부 영역이나 요소에 대한 개정도 가능하다는 '범주적 차원'도 포함되어 있다(박제윤, 2007: 3). 이런 점에서 '수시 개정 체제'는 '수시·부분' 개정 체제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체제에서 '수시·부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 이 체제가 의미하는 바는 생각보다 그리 명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교육과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부분적으로' 개정될 수 있다고 할 때, 얼마나 자주 혹은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것을 수시 개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선을 명확히 긋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는 수시 개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나 과정을 염두에 두면 더욱 복잡해진다. 즉 누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수시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누가 언제 주관하여 연구·개발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최종 고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수시로 혹은 부분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는 일이 그리 쉽지 않으며, 그 구체적 개정 과정이나 절차를 특정 형태로 체제화하는 일 또한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수시 개정 체제'가 함의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교육과정을 수시 개정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이 그림은 결국 이 체제를 추진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공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2005)는 2005년 2월 24일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그림 1]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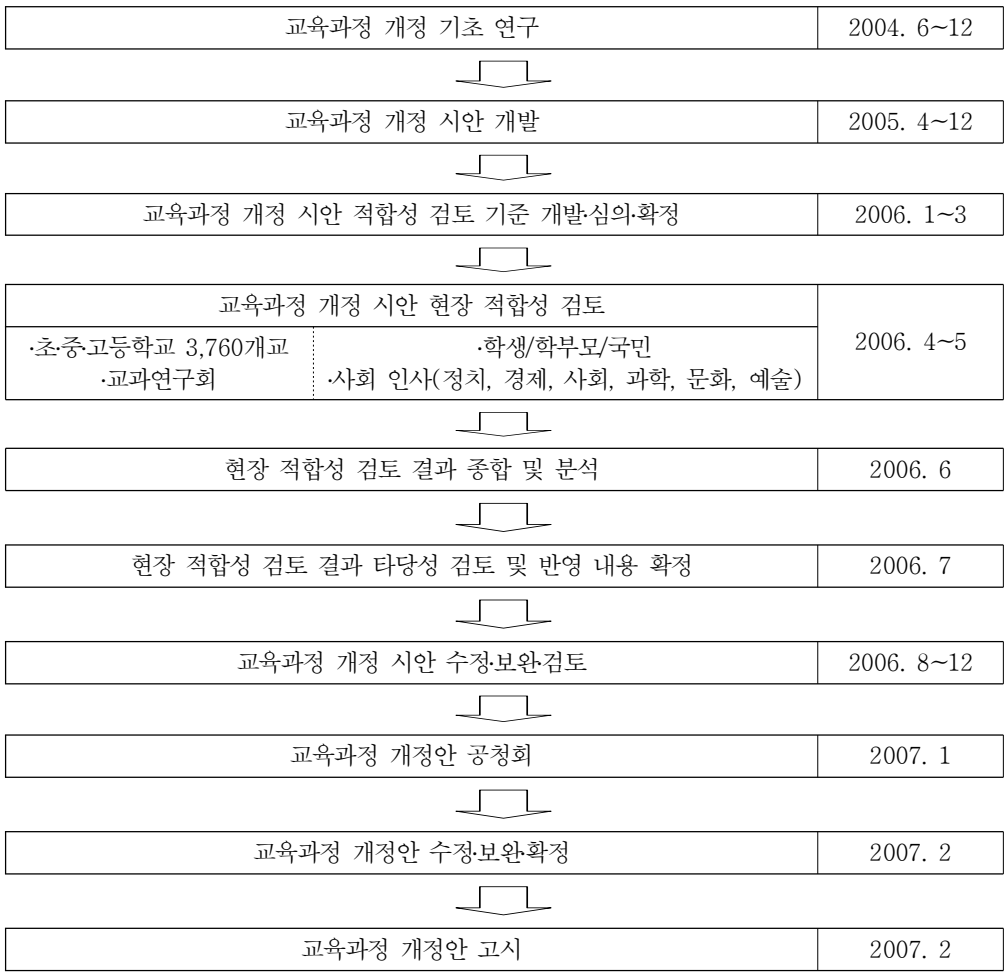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년 2월 24일 보도자료

[그림 1]에 따르면, 수시 개정 체제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은 '개정 요구 의견 수집 → 개정 요구안 검토 → 개정/운영보완 여부 결정 → 교육과정 개정 추진' 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 체제의 주요 특징은 "교육과정 개정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여, 현장 교원과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 점에 있다"(박제윤, 2007: 4). 말하자면 현장 교원과 일반 국민의 요구나 의견이 개정을 위한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개정 요구나 의견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심의회가 수시로 그 필요성 및 개정 방향·범위를 검토하게 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교육과정심의회는 이전보다 조사와 연구 기능이 강화되고 상설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교육과정 개정이나 보완의 최종적인 결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정 작업도 교육과정 연구기관과의 협력 하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수시 개정 체제에 대한 구체적 모습이 여전히 모호하긴 하지만, 적어도 국가가 의도하는 수시 개정 체제는 [그림 1]과 같은 추진 체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7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 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추진 체계를 따랐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07 교육과정'을 위한 개정 논의는 현장 교원과 일반 국민의 다양한 개정 요구와

의견 수렴으로부터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의에 의해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심의회 역시 개정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정의 발의부터 시작하여 개정의 범위, 방향, 예산, 일정, 방법 등 모든 계획과 행정 관련 사항을 주도하고 결정한 것이다(소경희 외, 2006; 27). 현장 교원이나 국민의 의견 수렴, 그리고 교육과정심의회와 검토는 교육과정 개정 시안이 개발되고 나서야 이루어졌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그림 2]의 '2007 교육과정'의 개정 절차와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2]에서는 '2007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시안 개발 이전에 현장 교원과 일반 국민의 개정 요구와 의견이 어떠한 형태로 수렴되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교육



[그림 2] '2007 교육과정'의 개정 절차와 과정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 p. 21의 내용을 일부 수정

과정심의회가 개정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개정 절차와 과정은 앞서 언급된 수시 개정 체제의 주요 특징, 즉 “교육과정 개정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강화하여 현장 교원과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박제윤, 2007: 4)에 따르면, 현장 교원이나 일반 국민의 개정 요구 의견 수렴을 위한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cutis.moe.go.kr)는 교육과정 개정이 발의된 이후인 2005년 9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 교원이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노력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시안이 개발된 이후인 2006년에야 이루어졌다. 교육과정심의회 역시 조사·연구 기능이 강화되지도, 그리고 상설 운영되지도 않았으며, 개정 시안에 대한 형식적 심의를 하는 정도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운영되었다.

이와 같이 ‘2007 교육과정’은 그 형식적인 체제 면에서 국가가 직접 구안한 ‘수시 개정 체제’의 추진 체계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2007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이 동시에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모든 교과에 걸쳐 교육과정 개정이 일시에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전보다 더 긴 기간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쳤다는 점, 마지막으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급에 걸쳐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수시·부분 개정이라기보다는 전면 개정의 성격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별 교육과정의 경우, 모든 교과가 2년여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교육과정 내용상의 많은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부분’ 개정보다는 ‘전면’ 개정의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2007c)는 ‘2007 교육과정’이 고시되는 시점에서도 이것이 ‘수시·부분 개정’임을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7 교육과정’은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고 2,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운영 등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시 개정’이라는 것이다. 이 점만을 고려한다면, 언뜻 보기에 ‘2007 교육과정’은 수시·부분 개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총론의 틀이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골격을 따라간다고 해서 혹은 제7차 교육과정 문서틀을 유지한다고 해서 모든 교과에 걸쳐 실질적인 내용상의 개정이 이루어진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이 모두 바뀌고 이에 따라 모든 교과의 교과서가 바뀌어 제공된다면, ‘부분’ 개정이라는 옷을 입혀 놓아도 그 실체는 ‘전면’ 개정인 것이다. ‘2007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라는 정책적 기초 속에서 탄생한 관계로, 전면 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수시 개정 체제’라는 틀로 포장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 2. '2007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 연구 개발 과정과 분리된 개정 결과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은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와 개정 시안 개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그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과정은 흔히 '연구·개발'(R & D: Research and Development) 모형이라고 불리는 것을 따른 것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충분한 기초 연구의 토대 위에 개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나 개정 시안 개발 연구는 전문 연구자 집단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2007 교육과정'의 경우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정의 전체적인 과정을 주도하였으나, 기초 연구나 개정 시안 개발 연구는 전문 연구자 집단에게 위탁하였다. 그리하여 총론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팀이 2004년 6~12월까지 개정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 해인 2005년 4~12월까지 개정 시안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개정 시안은 2006년 4~5월에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쳤으며, 이를 반영한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팀에 의해 2006년 6~12월에 수행되었다. 이후 2007년 1월 12일 최종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으며, 개정안은 2007년 2월 23일 확정되어 2월 28일 최종 고시되었다([그림 2] 참조).

'2007 교육과정'은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몇 가지 쟁점으로 인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쟁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놓은 개정 시안(허경철 외, 2005; 박순경 외, 2006)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2004년)나 개정 시안 개발 연구(2005년), 개정 시안에 대한 1차 공청회(2005년 11월), 그리고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2006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들이 최종 고시를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열린 2007년 1월의 공청회 자료를 통해 불거져 나온 것이다.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정 시안 개발 연구가 마무리 무렵인 2005년 11월에도 있었으나, 이 때 논의된 사항들은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2007년 1월의 공청회를 통해 대두된 쟁점은 이전에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이었다. 이 점은 개정 시안의 내용과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최종 개정안의 내용 간에 서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정 시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리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최종 개정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마련한 것임을 염두에 둘 때, 교육인적자원부가 모종의 과정을 거쳐 개정 시안에 없는 '새로운' 것을 최종 개정안을 통해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최종 개정안의 내용은 대부분 고시된 문서에 반영되었다. 총론의 경우, 이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시한 문서와 최종 개정안을 통해 개선된 내용이라고 밝힌 것 가운데 개정 시안의 내용과 다른 것을 제시해 보면 <표 1>과 같다.

&lt;표 1&gt; '2007 교육과정' 주요 개선 내용의 문서별 비교

문서 개선 내용	고시 문서 (교육인적자원부, 2007. 2. 28)	최종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2007. 1. 12)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12)	개정 시안 연구 개발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12)
재량활동 운영의 학교자율 권 확대	- 중등 재량활동 영역별 시간 배당을 학교에 일 임	- 단위학교에서 영역별 시 간 배당	-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통합 운영 가능토록 함	- 해당 사항 없음
'교과 집중 이수제' 도입	- 중등 교과외의 경우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집중이 수 허용	- 주당 이수시간이 1시간 인 교과(도덕, 음악, 미술 등)의 경우 허용	- 학년보다는 '학기' 집 중이수제 도입	- 해당 사항 없음
역사교육 강화	- '사회' 교과 내에서 중등 '역사' 과목(국사+세계 사)의 독립 - 고1학년 '역사' 수업시 수 확대	- '사회' 교과 내에서 중등 '역사' 과목(국사+세계 사)의 독립 - 고1학년 '역사' 수업시수 확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선택 과목군 조정	- 현행 5개를 6개 과목군 으로 조정 ·예·체능과목군(체육, 음 악, 미술)을 체육과목군 (체육)과 예술과목군(음 악, 미술)으로 분리	- 7개 과목군으로 조정 ·과학기술과목군(수학, 과 학, 기술가정)을 수학과 학과목군과 기술·가정과 목군으로 분리 ·예·체능과목군(체육, 음 악, 미술)을 체육과목군 (체육)과 예술과목군(음 악, 미술)으로 분리	- 현행 5개 과목군 유지	- 6개 과목군으로 조정 ·외국어과목군을 영어과 목군과 제2외국어과목 군으로 분리
주5일 수업제 시행 관련 수업시수 감축	- 주5일 수업제 월2회 시 행에 따른 초3~고3 주 당 1시간 감축 ·초등학교, 고2~3: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감축 ·초1~고1: 재량활동 중 교 과재량활동에서 감축	- 초등학교: 학교자율로 교과에서 감축 - 중학교·고1: 재량활동의 교과 심화보충학습에서 감축 - 고2~3: 교과 총 이수단 위에서 4단위(연간 2단 위) 감축	-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 대비 수업 시수 감축 ·초1~2학년: 주당 1시간 감 축 ·초3~고3: 주당 2시간 감축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중심 의 수업시수 감축	-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 대비 수업 시수 감축 ·초1~2학년: 주당 1시간 감축 ·초3~고3: 주당 2시간 감 축

<표 1>에 따르면, '2007 교육과정'에 담겨진 주요 개선 내용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개정 시안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많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 교육과정'의 주요 개선 내용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한 개정 시안 개발 연구나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의 내용과 무관하거나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최종 개정안 발표 후 가장 논란이 되었던 고등학교 선택 과목군의 조정은 개정 시안이나 이에 대한 수정·보완 보고서에 제시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 시안에서는 외국어과목군을 영어과목군과 제2외국어과목군으로 분리시키는 안을 제시했으며, 수정·보완 보고서에서는 현행 5개 과목군을 유지하

는 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과목군을 수학·과학과목군과 기술·가정과목군으로, 그리고 예·체능과목군을 체육과목군과 예술과목군으로 분리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종 개정안에 제시된 선택 과목군의 조정이 어떻게 해서 개정 시안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는지를 '투명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선택 과목군의 조정 문제는 공청회 이후 여론의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모종의' 조정 과정을 거쳐 예·체능과목군을 체육과목군과 예술과목군으로 분리시키는 방안만을 살리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사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총론 개정 시안의 주된 초점은 <표 1>에 제시된 개선 사항이 아니라 주5일 수업제 전면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 편제와 수업 시수 조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개정 시안 개발 연구 보고서(허경철 외, 2005) 표지에 제시된 "2005년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탁과제 답신"이라는 표기를 통해서나 그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개정 시안은 '주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 시기가 불투명해짐으로 인해 연구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실제 고시 문서에 반영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 최종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에서 "당초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을 전제로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 조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재까지 '주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에 따른 편제와 시간 배당 조정은 제외하게 되었다"(박제윤, 2007: 9)고 밝히고 있다. 이는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나 개정 시안 개발 연구가 '2007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토대가 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7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요 개선 내용이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식적으로 그 연구와 개발을 위탁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 결과에 토대를 두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박제윤, 2007: 8)가 제시한 '2007 교육과정' 개정 절차에 따르면, 개정 시안이 나온 이후에 수행된 일은 개정 시안에 대한 교사 대상의 현장 적합성 검토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cutis.moe.go.kr](http://cutis.moe.go.kr))를 통한 각 계각층의 의견 수렴이었다. 이러한 현장의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결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06년 보고서를 통해 제시되었으나,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보고서의 내용은 10여일 후에 개최된 공청회의 최종안에서 내놓은 것과 같지 않다. 그러나 이 최종안 개발에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의견이 어떤 이유로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개적인 문서나 논의의 형식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말하자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은 개정 시안이나 수정안에 없던 개선 내용이 어떻게 해서 최종 개정안에 제시될 수 있었는지가 이 과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블랙박스로 남아 있는 셈이다. 더

군다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종 개정안에 제시된 ‘새로운’ 개선안은 고시 시점에 임박해서 공개되었다. 따라서 이 ‘새로운’ 개선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논의는 어쩌면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은 것이었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연구자들은 ‘2007 교육과정’의 최종 개선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기회조차 없는 체로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 Ⅲ. ‘2007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및 내용

‘2007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은 2009년 이후의 사회상을 염두에 두고 이 사회를 살아가갈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에서는 ‘2007 교육과정’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비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개정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 본다.

#### 1. ‘2007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수시 개정 체제’에 갇힌 교육과정 개정 방향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정한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점은 교육과정의 개정 이유와 방향에 대한 것일 것이다. 즉 왜 현행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하며, 이를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 이를 위한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2007 교육과정’의 경우, 그 개정의 이유와 개정 방향이 관련 문서마다 상이하게 나열되어 있어 본격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2007 교육과정’은 당초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남에 따른 개정에 대한 기대와 압박, 현행 교육과정이 갖는 문제점 개선의 필요, 사회적 요구의 종합적 검토 및 반영의 필요,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대비할 필요 등의 이유로 개정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안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개정의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유는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대비할 필요성 때문이었던 것 같다(허경철 외, 2005: 5). 그러나 앞서 지적된 바 있듯이, 주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 시기가 확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러한 개정의 직접적인 이유는 고시되기 직전의 공청회와 고시 관련 자료를 통해 부각될 수 없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2007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표 2>와 같다.

<표 2> '2007 교육과정' 개정 방향

고시 관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2. 23)	최종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2007. 1. 12)	개정 시안 개발 연구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 및 체제 유지</li> <li>■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의 반영</li> <li>■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li> <li>■ 교과별 교육내용의 적정화 추진</li> <li>■ 수업 시수 일부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은 개선</li> <li>■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li> <li>■ 국가사회적 요구사항 반영</li> <li>■ 교과별 교육내용의 적정화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 개정 체제 도입에 따른 부분적 개정</li> <li>■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 및 체제 유지</li> <li>■ 총론과 각론을 동시에 연구개발</li> <li>■ 현행 교육과정의 실질적 개선에 주안점</li> <li>■ 지속되어 온 국가 교육과정의 토대 위에서 출발</li> </ul>

<표 2>에서 '2007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으나, 주된 초점은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 및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2007 교육과정'이 정책적으로 도입된 수시 개정 체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했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시 개정 체제'라는 정책적 틀 속에 갇힌 '2007 교육과정'은 좀 더 적극적인 개정 방향을 추구하기보다는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와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2007 교육과정'의 기초 연구 보고서(허경철 외, 2004)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기초 연구팀은 '2007 교육과정'이 적용될 시점인 2009년 이후의 사회가 제7차 교육과정 개정시에 설정했던 사회 변화의 흐름과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 변화의 방향이나 미래 사회의 모습을 전망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7차 개정시에 이루어졌던 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 내용이 계속 유효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허경철 외, 2004: 18)라고 가볍게 단정 짓고 있다.

그러나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 방향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 교육과정이 적용될 2009년 이후의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최근에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혁은 미래 사회의 변화를 좀 더 심도 있게 전망하고 이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미래 사회를 위한 교육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보다는 이를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쉽게 예단해 버리고 현행의 체제를 2010년대에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었는지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 2. '2007 교육과정'의 내용: 개인적·사회적 적합성 및 책무성의 문제

'2007 교육과정'은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체제와 틀을 유지한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종전의 교육과정 구조를 따르고 있다. 개정된 국가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종전의 이원 구조, 즉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경우, 이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교과도 외견상 종전과 동일한 명칭의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된 사항은 과학 및 역사 교육 강화 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과학과 역사 수업 시간을 주당 1시간 확대하고 대신에 재량활동 시간을 축소한 점, 중등의 경우 '사회' 교과 내에서 국사와 세계사를 분리시켜 '역사'로 독립시킨 점, 그리고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범교과 학습 내용으로 반영하도록 한 점 등이다.

따라서 '2007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볼 때, 일부 영역 및 교과의 수업 시수 조정과 '역사'의 독립 외에는 변한 것이 없어 보인다. 이 점은 달리 해석하면, 종전의 교과 중심적 교육과정 구조가 유지 혹은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교육과정 구조 속에서 재량활동의 수업 시수를 줄이고 대신에 교과 영역의 수업 시수를 확대한 점이나 통합 사회에서 '역사'를 분리한 점은 종전보다 교과 중심적 관점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변화는 미래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종래에 다루어왔던 교과 이외의 새로운 범주에 대한 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미래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애능력이나 국가 사회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학습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최근 여러 나라는 교육과정 개혁을 통하여 교과 중심적 교육과정 구조를 탈피하고, 교과보다는 학생들의 향후 삶에 필요한 '학습영역'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07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과정 구조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개인적·사회적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엿보기 어렵다.

또한 '2007 교육과정'의 총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각 교과의 학년별 수업 시수를 규정해 주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즉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업에 대해 국가가 학년별 수업 시수를 정해 줌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 편제표에 제시된 학년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와 교과별 수업 시수는 대개의 경우 그대로 학교 시간표로 옮겨지게 된다. 학교가 학교의 형편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자율권이 그다지 없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이 각 학교

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나 교과별 수업 시수를 학년별로 결정해 주는 것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하는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국가나 주수준의 교육과정은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을 편성하기 위한 틀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달성해야 할 것을 적절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은 주로 전자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규정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 즉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 및 교과별 수업 시수를 학년별로 제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그러나 후자, 즉 국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해당 단계의 교육과정을 적절히 이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명료한 기준을 설정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는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지침은 있으나, 이를 적절히 학습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는 것이다. 이 기준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적절히 파악하고,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국가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2007 교육과정'은 그 내용에 있어서 현행의 교과 중심적 교육과정 구조를 고수함으로써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삶의 양식에 개인이 적극 대처하는데 필요한 학습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과정의 개인적·사회적 적합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년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와 그 교과의 수업 시수를 정해주는 데 초점을 맞출 뿐, 이를 적절히 이수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개인적·사회적 적합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재구조화나, 책무성과 관련한 국가 교육과정의 역할 및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된다.

#### IV. 국가 교육과정 개혁 과제 탐색

'2007 교육과정'은 그 개정 체제나 과정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고시되었고 향후 적용될 예정이다. '2007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라는 개정 방식으로 인해 우리의 국가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채, 종래의 틀 속에서 개정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2007 교육과정'은 종래 국가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개혁 과제를 그 개정 체제, 구조와 편제, 성격과 역할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

## 1. 국가 교육과정 개정 형식 및 체제: '체제' 논의 탈피

앞서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2007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은 공식적으로 '수시 개정 체제'를 따른 것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 '수시 개정 체제'가 '2007 교육과정'의 주된 개정 방향으로 되어있기까지 하다. 개정의 체제나 형식이 교육과정 개정 방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이전 교육과정의 경우,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제3차 교육과정), '기초교육 강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제5차 교육과정),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제7차 교육과정)<sup>4)</sup> 등 개정 방식보다는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나 지향점이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부각되어 왔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개정 체제에 대한 논의가 부각된 것과 관련하여, 황규호(2003: 40)는 '교육과정 개정 방식'이 도대체 관심과 논의의 과제로 부각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개정 절차나 과정 등 개정 방식은 구체적인 개정의 내용이나 방향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다. 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 하느냐 하는 것이, 이를 어떤 체제나 형식을 통해 개정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2007 교육과정'은 개정 체제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개정의 주된 초점이 되어야 할 개정 내용이나 방향이 이 체제에 갇힌 격이 되었다.

물론 이번 개정에서 '수시 개정 체제' 부각에 '집착'을 보이는 데에는 정책적인 이유 이외에도 그동안에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정 관행, 즉 '전면·일시'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전면·일시' 개정을 '부분·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교육과정 개정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김재춘, 2003; 황규호, 2003)이 금번 개정에서 제시된 바 있었다. 예컨대 김재춘(2003: 313)은 총론과 무관하게 교과별로 순차적인 부분·수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목 편제표와 시간 배당은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 교과목의 삭제와 새로운 교과목의 추가 혹은 학년별 교과별 주당 수업 시수나 단위 수의 변화 등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요컨대 교육과정 개정 체제 자체의 변화만으로 교육과정 개정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2007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라는 틀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제8차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제7차 교육과정의 부분 수정임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이다. 그러나 '2007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만 유지할 뿐, 교과별 교육과정은 그 형식과 내용 모두에

4) 각 차시 교육과정 중 '교육과정해설서'(교육부, 1998a)에 '기본 방향'이 명료히 제시된 것만 예시함.



걸쳐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5차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는 ‘부분 개정’을 기본 원칙으로”(교육부, 1998a: 54)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 ‘제5차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또한 각 차시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부분·수시 개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에서의 한자교육 폐지, 반공·도덕 생활의 주당 수업 시수 확대, 특별활동 구성체계 보완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교육부, 1998a: 43-44). 제6차 교육과정 시행 중에도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종래의 교육과정에서도 ‘수시 개정 체제’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필요에 따라 부분 개정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루어진 몇 가지 부분 개정을 마치 새로 도입된 수시 개정 체제에 따른 업적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기에 이루어진 3차례의 부분 개정(엄밀히 말하면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 개정)이 새로 도입된 수시 개정 체제에 따른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박제윤, 2007: 6). 2004년(2004. 11. 26)에 이루어진 특수목적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정, 2005년(2005. 12. 28)의 공고 2·1체제 교육과정과 국사 교과 교육과정 개정, 그리고 2006년 8월에 이루어진 수학·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개정은 종래에도 필요한 경우 이루어진 것으로 하등 새로운 것이 없다. 즉 이러한 개정은 수시 개정 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개정 방식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개정 체제로서의 ‘전면·일시’ 혹은 ‘부분·수시’ 구분은 실제적인 의미가 없으며, 더군다나 이를 대립적인 관계로 볼 필요는 더욱 없다. 국가적 수준에서 변화가 필요하면 ‘전면’ 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총론의 경우, 기존의 교육패러다임에 변화가 요청된다면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수시 개정은 이러한 전면 개정된 틀 속에서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시 개정의 형태는 교과별로도 학교급별 혹은 학년군별로도 가능할 수 있다. 최근 영국의 경우도 2000년에 전면 개정한 교육과정을 key stage 4(10-11학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만 대폭 개정하여 2004년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체제가 ‘전면·주기’ 혹은 ‘부분·수시’이어야 하는가는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며, 이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이며, 이를 어떤 체제로 할 것이냐는 개선 내용의 비중에 비추어 부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전면·일시’ 혹은 ‘부분·수시’ 개정 체제에 관한 논란은 아마도 우리가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 ‘제1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 등의 ‘차시’를 붙여 온 관례 때문에 야기된 것일

수도 있다. '차시'를 붙여 온 관행으로 인해 일정한 개정 주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과정은 '주기적인' 개정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로 인해 각 차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부분 개정이 부각되지 못하고 모든 교육과정의 문제가 마치 '주기·전면' 개정 체제 때문인 것으로 오해되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 '차시'를 붙이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설사 전면 개정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차시'를 붙이는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정 연도나 고시 연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명명한다면 '체제'에 집착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이 점에서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은 고시된 시점을 고려하여 '2007 교육과정'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 2. 국가 교육과정 구조와 편제: 개인적·사회적 '적합성' 추구를 향한 재구조화

어느 나라에서나 교육과정 개혁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통 중의 하나는 '교과'의 상징적인 영향력이다. 교육과정은 '교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오랜 관습과 신념이 바로 교육과정 개혁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Goodson, 1994; Rogers, 1997, Penny, 1998; Macdonald, 2003). 이에 따르면, 수차례의 교육과정 개혁을 거치면서도 전통적인 '교과' 구조는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으며, 이러한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구조에 변화가 없다면 교육과정 개혁은 헛물켜기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혁과 관련한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과'는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왔다는 역사적 사실과, 바로 이 점 때문에 '교과' 구조를 벗어던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어렵다는 지적 사이에서 향후 교육과정 개혁은 그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 개혁 흐름에서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는 교육과정 문서에서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구조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점이다. 그 변화의 정도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긴 하나, 교육과정을 새로운 구조로 변형시키려는 노력이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10여년 전부터 학문에 기반을 둔 교과들을 이보다 확대된 범위의 '학습영역'으로 묶고 있다. 즉 이들 나라는 학습영역 중심의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핵심학습영역'(Key Learning Areas)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Macdonald, 2003; Penny, 1998). 최근에 개발된 대만의 신 교육과정 또한 전통적인 교과를 7개의 주요 학습영역으로 대체하고 있다(Drake & Burns, 2004: 4). 북미 캐나다의 퀘벡주나 온타리오주도 간학문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구조화하고 있는 것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Drake & Burns, 2004).

'2007 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특별활동'은 제1차 교육과정 때부터 '교과'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틀이 되어 왔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은 교과 이외의 기타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며(교육부, 1998b: 192), 이후 이러한 의미는 변한 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특별활동을 우리나라처럼 교육과정에 명문화하여 시간을 배당하고 그 구체적 활동 영역을 제시해 주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교육부, 1998b: 178). 대부분의 나라들은 학교에서 특별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학교 실정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 교육과정'의 경우는 여전히 특별활동에 대해 국가가 학년별 주당 수업 시수를 배당하고 그 구체적 활동 영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이 시간까지 담당해야 하며, 국가 교육과정 편제표에 따라 통일적으로 운영해야만 한다. 더구나 일부 활동은 최근에 학교교육에 강조되고 있는 '방과 후 활동'과 중복되는 면도 있다. 이제 제1차 교육과정 때 도입된 특별활동은 그 운영 시간이나 내용을 학교 자율에 맡길 때가 되었다고 본다.

재량활동의 경우, 초등학교는 제6차 교육과정 때부터, 그리고 중등학교는 제7차 교육과정 때부터 하나의 교육과정 영역이 되었다. 재량활동은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재량활동 역시 국가가 시간 배당 및 영역별 활동의 범주와 활동 내용을 제시해 줌으로써 국가가 학교의 자율적 활동을 '강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특히 중등 재량활동의 경우는 '교과 재량활동'을 통하여 국민공통기본 교과 및 선택 과목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과' 영역과의 차별성도 없다. 이러한 재량활동은 '2007 교육과정'에서 '교과' 영역에 일부 시간을 빼앗겨 그 시수마저 대폭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재량활동은 그 정체성이나 중요성에 있어서 다른 교육과정 영역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별활동'이든 '재량활동'이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교육과정 편제에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국가의 '기준'을 제공하는 성격을 띠고자 한다면 학교가 꼭 해야 할 것만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내용이든 시수이든 최소로 해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다. 말하자면, '특별'이든 '재량'이든 그 활동 내용 및 시수가 학교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은 국가 교육과정 편제에 넣어서 이를 강제적으로 유도할 것이 아니라, 필수 교과목이나 학년별 수업 시수에 대한 국가 기준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활동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학교에 맡긴다고 해서 국가 교육과정을 ‘교과’로만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국가 교육과정 편제에서 ‘교과’는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삶의 양상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학습이 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은 학생들의 개인적·사회적 발달을 위한 것이거나, 평생학습 사회에서 필요한 간학문적 능력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교육할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유형의 학습을 도외시킬 수 없다. 물론 ‘2007 교육과정’에서도 새로이 요구되는 국가·사회적 요구를 ‘범교과 학습’의 형태로 재량활동이나 각 교과를 통해서 다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기준은 다른 기준에 비해 성격상 매우 약한 지침이라 실효성이 없다. 학생들이 당면할 사회에서 꼭 필요한 학습은 ‘교과’ 못지않게 국가 교육과정에 편제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다른 나라의 최근 교육과정 개혁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몇 개의 교과들을 묶거나 특정 교과 영역을 확대시켜 새롭게 설정하거나 혹은 교과 이외의 학습영역들을 편제시키는 방식으로 국가 교육과정 구조나 편제를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

### 3.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과 역할: ‘책임성’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성격 강화

21세기의 교육 담론을 지배하는 것 중의 하나는 책임성이다(Drake & Burns, 2004: 1). 교육자들은 책임성의 시대에 일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의도한 바의 성취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지구촌적인 교육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기준 중심 교육’(standards-based education)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나 호주에서 주별로 ‘기준’을 질적인 측면에서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국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시간(단위) 배당 기준’이 이를 잘 나타낸다. 즉 국가 교육과정의 ‘시간(단위) 배당 기준’표에는 학년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와 교과별 수업 시수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필수 기준으로서 학교가 마땅히 따라야 할 것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 편제표에 제시된 대로 교과와 교과별 수업 시수를 편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2007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총론의 강한 통제와 달리, 교과별 교육과정에는 단위학교가 따라야 할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많은 나라의 교과별 교육과정에서 ‘내용기준’과 더불어 ‘수행

혹은 평가기준'이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호주 빅토리아 주의 경우, 전자는 '학습초점'(learning focus)으로, 후자는 '기준'(standard)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다(VCAA, 2005). 여기서 전자는 교수학습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학습내용을 진술해 놓은 것이며, 후자는 학생들이 해당 단계에서 보여주어야 할 도전적인 수행수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준 가운데 학교에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후자, 즉 평가를 위한 수행 '기준'이다. 모든 학교는 정해진 보고 시점에 주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학습영역별로 학생의 성취 정도를 '기준'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호주 빅토리아주 교육과정은 주가 학습영역별로 수업 시수를 배당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빅토리아주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위학교에 맡기면서도 그 결과를 '기준'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각 학습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기준'에 대한 학교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에는 '내용기준'에 해당하는 것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수행 혹은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우리나라의 교과별 교육과정은 교과별로 학습해야 할 내용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2007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내용기준'은 '교과서'로 구체화되어 학교에 전달되며, 학교 교사들은 주로 '교과서'를 통해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구현한다. 국가 교육과정 기준이 교사들의 교수학습 과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가 교육과정에 평가와 보고를 위한 '기준'에 해당할 만한 것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국가 교육과정에 토대를 두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곧 국가 교육과정이 교육의 책무성을 따지기 위한 분명한 '기준'으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년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와 그 교과의 수업 시수를 정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작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교과별 수업과 평가를 위한 명료한 기준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의 시간표 편성만을 통제할 뿐, 각 교과별 수업에서 해당 단계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과 이에 대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현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에 막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교사 자율적이고 임의적일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이 교실 수업을 위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시간표 편성을 위한 통제보다는 교실 수업을 위한 분명한 '기준'으로서의 역할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 그리고 책무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이상향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성격과 역할을 좀 더 근본적으로 재고해 볼 때이다.

## V. 나가며

이 글은 최근 고시된 '2007 교육과정'을 반성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이 교육과정의 개정 및 고시 과정에서 발표된 관련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그 개정의 체제, 과정, 방향, 내용 등을 밝혀 보았다. 그러나 수집된 문헌들의 제한성과, 문헌 분석이 가지는 한계, 즉 문헌에 드러나지 않은 혹은 드러낼 수 없었던 장면에 대한 무지로 인해 '2007 교육과정'의 실체를 충분히 혹은 제대로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이 점은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의 추후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향후 국가 교육과정 개혁 과제를 그 개정 체제, 구조와 편제, 성격과 역할 측면에서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국가 교육과정이 좀 더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개인적·사회적 적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책무성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글에서 이러한 주장은 국가 교육과정 구조를 종래의 교과 중심적인 것으로부터 탈피하자는 논의와 함께 제시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종종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를 없애자는 논의인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오해는 국가 교육과정에 편제된 교과가 바로 학교 시간표상의 교과가 되어 왔던 우리의 오랜 관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의 시간표에 그대로 옮겨질 교과나 수업 시수를 처방하는 '지침'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최소한의 것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가 교육과정은 구체적 '교과'의 시간 배당보다는 학생들의 개인적 혹은 사회적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학습영역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학습영역은 종래 가르쳐왔던 '교과'의 성격을 떨 수도 있고 범교과적인 능력이나 기능의 성격을 떨 수도 있으며, 혹은 새로운 학습의 형태를 떨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성격을 떠든 간에 이를 위한 학습이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대개의 경우 이것은 교과를 통해서 혹은 교과와의 관련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은 학생들이 그들의 개인적·사회적 발달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어야 할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시간표를 직접 처방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 교육과정이 이러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구조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많은 논의와 탐색을 통해 접근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부(1998a).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총론, 재량활동-.
- \_\_\_\_\_ (1998b).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우리들은 1학년,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즐거운생활, 특별활동-.
- 교육인적자원부(2003).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 수시개선체제 구축」 업무추진 계획.
- \_\_\_\_\_ (2005). 보도자료. 2005. 2. 24.
- \_\_\_\_\_ (2007a). 교육과정.
- \_\_\_\_\_ (2007b). 보도자료. 2007. 2. 23.
- \_\_\_\_\_ (2007c).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안) 관련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 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 지침과 기준 -초·중등학교 총론-.
- 김재춘(2003).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부분, 수시 개정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교육과정연구, 21(3), 303-320.
- 박순경 외(200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제윤(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 소경희, 허경철, 박찬구, 김찬중, 양정모, 김진완(2006). 국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장기 연구 설계. 서울대학교-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우정호(2003).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방식에 대한 토론(2). 교육과정연구, 21(3), 31-37.
- 조난심, 김재춘, 박순경, 소경희, 조덕주, 홍후조(1999).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개발을 위한 방향 탐색. 2005년 11월 29일 공청회 자료집.
- 허경철(2003).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방식의 개선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21(3), 1-25.
- 허경철, 박순경, 김평국, 이미숙, 정영근, 홍후조, 김재춘(2004).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방향 설정 연구. 2004년도 교육과정 기초연구 위탁과제 답신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허경철, 박순경, 이광우, 이미숙, 정영근, 김진숙, 민용성, 김두정(2005). 초·중등학교 교육과

정 총론 개정(시안) 연구 개발. 2005년도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탁 과제 답신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후조(1999).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1): 전면 개정형에서 점진 개선형으로. *교육과정연구*, 17(2), 209-234

\_\_\_\_\_ (2003).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방식에 대한 토론(4). *교육과정연구*, 21(3), 47-57.

황규호(2003).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방식에 대한 토론(3). *교육과정연구*, 21(3), 39-45.

Drake, S. & R. Burns(2004). *Meeting standards through integrated curriculum*. VA: Alexandria, ASCD.

Goodson, I. F.(1994). *Studying curriculum: Cases and method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Macdonald, M.(2003). Curriculum change and the post-modern world: Is the school curriculum-reform movement an anachronism?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5(2), 139-149.

Penney, D.(1998). School subjects and structures: Reinforcing traditional voices in contemporary 'reforms' of education.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19(1), 5-17.

Rogers, B.(1997). Informing the shape of the curriculum. -New views of knowledge and its representation in schooling. In D. Scott(Ed.), *Curriculum studies -Major themes in education(Volume II)*(pp. 65-94). London: Routledge Falmer. 2003.

VCAA(2005). *Victorian Essential Learning Standards: Overview*.

\* 논문접수 2007년 5월 11일 / 1차 심사 2007년 6월 11일 / 2차 심사 2007년 6월 17일

\* 소경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과정 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역서로는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사와 교육과정', '내러티브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 e-mail: sohee@snu.ac.kr



## Abstract

## An Investigation into Tasks for Reforming National Curriculum: Reflection on 'Curriculum 2007'

So, Kyunghee\*

Recently the new national curriculum, 'curriculum 2007' was announced. It has been reported that 'curriculum 2000' followed an 'irregular revision system' newly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and it reflected various needs of our nation and society. However, there was a lot of controversy about the 'irregular revision system' that was brought into relief in this revision process. And critical review was needed about whether the new national curriculum was revised in a meaningful direction personally and socially to students who will live in our future society.

This study was to critically review and reflect on 'curriculum 2007' and to investigate the tasks for reforming national curriculum. For this study, I analyzed revision-related documents, materials, and research reports that were presented in the revision process.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I examined the system, process, direction, and content of '2007 curriculum' revision. The main conte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 revealed the reality of the 'irregular revision system' that 'curriculum 2000' had followed, and discussed the problems that the revision system caused. Second, I examined the problems that 'curriculum 2007' had through analyzing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its revision. Finally, I investigated some tasks for reform that we should consider in the future to improve our national curriculum.

Key words: national curriculum, curriculum 2007, irregular revision system, relevance, accountability

---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